

# 6월 추락사 미온적 대처...현장 안전불감증 키웠나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정부와 노동당국이 6개월 전 같은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한 미온적 조치로 현장 안전불감증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작업장 내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는데도, 중대재해 발생 현장(중대재해 사이렌)으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여태껏 관련 혐의로 책임자를 입건하지도 않는가 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장비 반입구 주변에서 비가림막(보양) 작업을 하던 직영 반장이 A(64)씨가 개구부로 추락해 크게 다쳤으며,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월 30일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안전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도 온라인 상에 공개돼 왔다.

하지만 ‘광주대표도서관’의 경우 이같은 조치에서 제외되면서 공공 기관 발주 공사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청측은 “관계자를 입건하려던 차였는데, 공공로게도 공사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 사망 뒤 3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혐의자를 특정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청은 또 다른 중대재해사업장과 달리,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사실을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공개하지도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온라인상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해당 사고 내용을 공지해왔다.

노동청, 중대재해법 입건 않고  
재발방지대책·안전 교육 미흡  
사망사고 발생도 공개 안해  
“붕괴 참사 단초 제공한 것” 지적

시공사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사고 뒤 바로 실시한 게 아니라 노동자 사망 2개월 뒤에야 나온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시(중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공공기관 공사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법적 적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노동계에서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들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인데도 철저한 책임과 조사를 진행하기는 커녕 미온적으로 대처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재발 방지 중심의 행정 조치가 뒤따랐다면 현장의 경각심을 끌어올려 사고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추락사고 사고 이후 작업중지와 현장 감독이 이뤄졌으며 입건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사이렌은 현장 경각심 차원에서 시행하고 오고 있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동청은 지난 11일 오후 2시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동청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도급 구조에서 원청과 각 수급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여부를 분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지난 6월 추락사고가 있었던 현장이라면 그때 조사를 철저히 해 재



합동 감식

1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경찰·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하고 있다.

발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광주시의 조급함, 제도의 맹점, 노동당국 수사의 허점, 행정의 안일함 등이 겹치면서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산재를 막는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사망사고가 한 차례 발생했던 사업장인데도 관공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오히려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다. 재발을 막기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고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제주항공 참사 1년, 이제야 압수수색 왜

자료 확보하려 사조위서 집행...경찰 “전문적 해석 어려워 지연”

“수사 의지 있나”비판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압수수색에 나서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발족 8개월 뒤에야 자료 확보를 내세워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전·현직 국토부 관계자 등 총 44명을 입건만 했을 뿐 처벌 수위를 구분하지 못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경찰청, 16일 오전 9시 세종시, 김포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뒤늦게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이유로 ‘전문적인 해석의 어려움’을 꼽았다. 압수수색을 일찍 진행해 현물을 확보하더라도, 경찰에 항공기 관련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결국 감정을 사조위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사조위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다고 판단,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 경

찰 설명이다.

결국, 경찰 설명대로라면 참사 1년이 다되도록 사건에 대한 전문적 해석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참사 관련자들의 책임 경중·처벌 수위, 혐의 적용 여부조차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무능한 수사력과 유족·관광업계의 기대와 기다림을 도외시한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재승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항공 분야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해도, 법과 규정이 명백한 문턱(로컬라이저)과 조류충돌, 관제 등을 조사하면 책임 소재는 충분히 가려지지 않겠느냐”며 “사조위는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은 책임자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는 건데 사조위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수사한다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가 간단한 사고가 아니다 보니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며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데 수사관을 대거 투입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정부 사조위 꾸리고 붕괴 사고 규명 나서

최병정 경기대 교수 위원장 선임  
사전절차·설계도 적정성 등 조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정부가 사고 규명에 나섰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꾸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조위는 강구조·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경기대 최병정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꾸렸다. 운영 기간은

16일부터 내년 4월 중순까지로, 이후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이날 오후 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사전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공사시방서 등) 적정성 ▲설계도서 작성·검토 (구조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등) 적정성 ▲시공과정 중 품질·안전관리(PC합성보,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기동접합부의 시공불량, 콘크리트 타설 등) 적정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발주청·시공사·관리 등)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공기 지연 등 검토할 방침이다.

최병정 교수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위



최병정 교수

원 구성으로는 교수, 실무자, 기업체 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온 것 같다. 모두의 의견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 위원장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 영상으로 지켜봐왔다.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직접 현장을 살피고 전반적인 원인을 살펴볼 예정이다”며 “이후 브리핑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곡**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곡!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곡! 바로 바로 확인까지 곡!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 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